

일본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Ⅱ)*

장재봉 · 백선희

중요 대책

1. 안정적인 식량공급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정책 및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 푸드 체인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먹을거리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국민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정책 및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내 푸드 체인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먹을거리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한다. 또한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1)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① 식품 안전성 향상

「발생가능한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 방지」를 기본으로 국산 농림수산물·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식품 속 위해요인 함유실태를 조사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과학적 지식·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국제기준 제정에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위해요소 평가기관의 기능강

* 본 내용은 일본 농무성이 발표한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재봉 부연구위원과 서울대학교 백선희가 작성하였다(jbchang@krei.re.kr, 02-3299-4140, back1514@paran.com).

화와 관리기관을 일원화하는 「식품안전청」에 대하여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설립 여부를 검토한다.

② 푸드체인 단계별 대책

가. 생산단계

산지에서의 농업생산공정관리(GAP)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여러 가지 GAP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학적 지식과 소비자 및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안전과 함께 환경보전, 노동안전과 같이 폭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GAP의 추진은,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생산자도 혜택을 받으므로 어느 한쪽에서의 입장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고려하며, 무엇보다 산지에서의 대책을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또한 비료, 농약, 사료, 동물용 의약품 등의 생산자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사용을 추진한다.

나. 제조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도 GAP와 같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그 도입비용이 증가하여 진행 속도가 더디다. 따라서 「식품 제조과정 관리의 고도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장기저리용자와 함께 식품의 제조실태에 따라 낮은 비용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수단을 보급하고, 현장책임자 양성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또한 HACCP 도입이 곤란한 영세계층에서는 그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다. 수입단계

수입식품에서 유독·유해물질이 발견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수입 검역 체제의 강화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과의 협의와 재외 공관을 통한 현지조사 실시, 정보 입수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연계 추진, 감시체제 강화 등을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한다.

라. 유통단계

식품과 관련된 이력추적제(Traceability)에 대해서는, 「미곡 거래 등과 관련한 정보기록 및 산지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미곡 거래 등에 대한 기록 작성·보존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입을 원활히 진행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호, 적절한 유통과 관리를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미곡 이외의 음식료품에 대해서도 미곡과 관련한 제도의 실시상황을 바탕으로, 입출하 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부여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결과에 근거해 제도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한다. 또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농림어업인과 중소식품산업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확대한다.

마. 소비자 신뢰 확보

식품안전성 확립을 위해 위해요인 함유 실태를 조사하고, 과학적 근거에 의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미국 이외의 음식료품에 대한 이력추적제 검토와 함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식품표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가공식품에 있어서 원료의 원산지표시 의무부여제를 확대한다. 또한 JAS 규격의 책정에 있어 재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하면서, 인터넷 통신 판매시 식품정보 제공방법의 표준화 작업 등과 같은 새로운 규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행 가능한 것부터 규격화한다.

먹을거리에 대한 신뢰 향상을 위한 식품산업 사업자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품질관리나 소비자 대응 등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관련 대책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나간다.

(2) 식(食)과 농(農)의 관계

① 국민과의 소통

잠재적인 수요 발굴과 영양밸런스의 개선을 통해 농업과 국민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특히 아침밥 먹기 운동이나 학교급식 추진 등을 통한 쌀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빵이나 면을 전제로 한 국산 밀·미분 이용 확대, 수입 원료·사료의 이용 비율이 높은 대두가공식품이나 축산물 생산에서의 국산 대두·사료의 이용 증가, 채소와 과일 섭취증가 등을 위하여 식품산업 종사자와 농업관계 단체 등의 자발적인 대책 마련을 촉진한다.

또한 국산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이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의 시작임을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최근의 식(食)과 농(農)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을 이용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본형 식생활 추진을 비롯하여 식생활 개선과 먹을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식생활과 농림수산물·식품의 생산·유통 현장에서의 체험 등을 통해 먹을거리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속하여 식육을 추진한다.

② 지산지소 추진

지산지소 대책의 성공 사례나 새로운 대책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소개하면서, 생산자·농업 관계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자발적인 대책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농산물의 품목 및 수량 확대와 직거래소간의 제휴를 통해 1년 내내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산자·농업 관계단체와 실수요자인 학교 및 기업체급식, 외식·중식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농산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자와 실수요자와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공급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일본 각지의 특징적인 식생활 문화를 발굴·유지하여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폭넓은 농산물의 이용 촉진과 부가가치의 향상을 도모한다.

(3) 식품산업 발전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산농산물의 최대 수요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식품산업은 국내외의 원료 조달에 있어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인구 감소·고령

잠재적인 수요 발굴과 영양밸런스의 개선을 통해 농업과 국민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화 등, 변화된 국내시장에 적절히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에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를 위해 가칭 「식품산업의 발전 방향」을 2010년도에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필요에 따른 산업 등 개별 분야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명확하게 한다.

① 푸드체인 내 제휴 강화

푸드체인의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식품산업에 의한 국내 농업과의 연계 강화나 농업으로의 참여(參入) 촉진, 해외로부터의 원료 조달 안정화와 함께, 거래 정보의 표준화와 같은 식품 유통의 효율화·고도화와 관계된 푸드체인의 각 단계 사이의 연계를 통한 대책을 추진한다.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콜드체인 시스템」 확립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 추진 등을 통해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해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시장 재편과 도·중매인의 경영체질을 강화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한 다양한 배달 서비스를 전개하는 등, 소비자에게 먹거리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한다.

② 국내 시장 활성화

식품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 농림수산물 등의 지역 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와 지역 브랜드 활용 등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신상품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국내시장을 유지·회복시킨다.

또한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삭감, 식품 폐기물 삭감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 등 자발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해외 사업기반 강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식생활 문화를 전파하고 제휴 형태로 식품 제조·유통업의 현지생산·판매 대책과 외식산업의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현지의 사업기반을 강화하여 일본으로의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되도록 한다.

(4) 종합적인 식량 안전보장의 확립

국내의 농업생산 증대와 함께 수입 및 비축량의 조절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의 필수 요소이다. 급속한 글로벌화, 복잡해진 식품 생산유통과정으로 푸드체인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불안 요인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① 생산대책

생산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 등을 강구한다. 특히 비료에 대해서는, 토양성분 진단에 근거한 시비설계의 재검토 등에 따라 적정 시비를 파악하고 경축(耕畜) 연계에 의한 퇴비의 활용도를 최대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학비료의 경우에는 수입상대국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인

국내의 농업생산 증대와 함께 수입 및 비축량의 조절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의 필수 요소이다.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농작물의 품종 개량에 필수적인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수집·보존·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등 식량의 안정공급에 이바지하는 품종의 개발을 촉진한다.

수입 검역과 국내 방제·방역 조치의 강화에 대해서는, 해외로부터의 전염을 우선적으로 방지하고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위험도 평가와 관리 조치를 실시한다.

② 유통 및 소비대책

대규모 유통 혼란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 방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민간사업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먹거리의 공급라인 확보를 도모한다. 한편, 「주요 식량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쌀·보리의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최적의 비축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③ 국제공급 대책: 국제 동향 분석 및 협력·투자 추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식량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제사회와 연대해 시장을 감시·규제함으로써 선물시장에서 왜곡된 가격형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프리카 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 개발, 먹거리 안전에 관한 기술 및 자금 지원, 식량 원조를 계속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식량안전보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아세안+3’ 긴급 쌀 비축제의 실현 등에 노력한다.

국제사회 식량안전보장을 위한 공조, 일본의 농산물 수입 안정화·다각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해외에서의 농업생산을 포함한 해외 농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 농업투자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른 책임있는 국제농업투자를 촉진한다.

(5) 국제 교섭력 강화

WTO DDA 협상에 있어 「다양한 농업의 공존」이라는 이념 아래 식량 수입국로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각국의 농업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무역 규정을 확립하도록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 추진에 있어 관계국의 식량안정공급을 인정하면서도 EPA(경제연계협정),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량자급률 향상, 국내 농업·농촌 발전 등을 저해하는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WTO DDA 협상에 있어 다양한 농업의 공존이라는 이념 아래, 각국의 농업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무역 규정을 확립하도록 한다.

2. 지속적인 발전

(1)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시행과 관련 제도 정비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며,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생산의 비용 상승을 막아 겸업농가와 소규모경영을 포함한 의욕있는 모든 농업인이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정부가 직접교부금의 형태로 지불하는 호별 소득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작목별로 강구해 온 생산 관계대책을 재정리해 정책 목적과 정책 수단의 대응 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다양한 용도·수요에 따른 생산 확대 대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① 호별 소득보상 대책과 쌀 수급 조정

2010년도부터 논 농업을 대상으로, 쌀을 생산수량목표에 입각해 생산한 판매농가·집락 영농에 대하여 표준생산 비용과 판매가격의 차액을 교부한다. 아울러 쌀 생산수량목표 달성과 상관없이 식량자급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리, 대두, 미분용 쌀·사료용 쌀 등의 전략작물의 생산에 대하여 주식용 쌀과 같은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직접 교부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주식용 쌀 수요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에 의해 앞으로도 감소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수급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년마다 수요실적 등에 근거하여 생산수량목표를 책정·배분하여, 수요에 따른 쌀 공급을 추진한다. 이때 생산수량목표에 맞추어 생산한 농가가 호별 소득 보상 제도의 대상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농업인이 수급 조정에 참가하도록, 목표의 미달성분을 다음 해의 목표로부터 공제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는 2010년부터 실시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조정에 수반되는 강제성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한다.

②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시행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밑돌고 있는 쌀, 보리, 대두 등의 작물을 대상으로 제도설계를 실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비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한다.

축산·낙농에 대해서는, 현재 강구하고 있는 축종마다의 축산 경영안정대책의 시행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태와 도입 시기를 검토한다.

채소나 과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밑도는 상황은 아니므로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경영안정 확보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지원책을 검토한다. 또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③ 생산·경영 관계대책 정리

호별 소득 보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논·밭농사 경영소득안정대책과 품목

판매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판매 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정부가 직접교부금의 형태로 지불하는 호별 소득보상제도를 도입한다.

마다 실시되고 있는 경영안정대책과의 중복성을 판단하여 간소하고 알기 쉬운 정책 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지금까지 작목별로 추진해온 각종 생산 진흥책과 관련해서는, 작목별로의 메뉴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통합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2) 6차산업화

농산어촌에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을 생산하여 가공함에 따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유통·판매하는 등 지역의 제1차 산업으로서의 농림수산업과 이와 관련된 2·3차 산업에 관계되는 사업을 융합시킴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식생활 변화와 지역의 실정, 품목마다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품질향상, 가공과 직거래 등에 의한 부가가치 향상이나 브랜드화 추진 등에 의한 판매가격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공·업무용 수요의 공급증가와 수출 등에 의한 판매량 확대, 작업 규모의 확대, 기반 정비의 추진, 자재 가격·사용량의 저감 등에 의한 비용 감축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을 기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과 소득을 확보해 나간다.

① 생산·가공·판매의 단일화

농업인이 가공, 판매 등에 직접 진출해 경영을 다각화·고도화하는 대책을 지원함으로써 생산·가공·판매의 단일화를 추진한다. 신선식품에서 가공식품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가공식품이나 외식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화에 치밀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공·유통(판매), 외식·중식과 농업 측면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수요자와의 계약에 의한 가공용 농산물 생산·판매와 산지에서의 1차 가공 대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식품산업 사업자의 농업 참입을 추진한다.

② 산지 전략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지단위의 대책이 효과적이므로 각각의 산지별로 생산·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기간시설 정비, 상품개발과 판로 개척에 노력하고, 산지 간 연계나 경축(耕畜) 연계, 지역 브랜드 확립과 같은 생산체제와 판매기획력의 강화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때 보급지도원 등과 신기술, 경영, 판매, 가공 등의 노하우를 가진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연대하여 지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③ 수익성 높은 부문의 육성·강화

농업소득의 증대와 이를 위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비식용 작물의 육성·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산출액 세계 제3위의 화훼는 생산자와 판매사업자의 연계를 통해서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에 주목해 새로운 식품 소재나 공업·제약 원료가 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효율성 검토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해 개발·발굴을 실시하고 제품화를 위해 산지와

제1차 산업으로서의 농림수산업과 이와 관련된 2·3차 산업에 관계되는 사업을 융합시킴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의 매칭 등을 진행한다. 또한 1년 내내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한 식물공장 등 고도의 시설 원예에 대하여, 저비용화 기술, 고부가가치화 기술 개발·실용화 등을 추진한다.

④ 수출 대책

세계적으로 일식의 확대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응해, 고품질의 일본 농림수산물·식품의 해외 판로를 유지·확대함으로써 수출액을 2020년까지 1조 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출환경 정비를 비롯한 종합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수출 촉진을 위한 품목 및 나라·지역을 중점화해, 공정표를 책정한 다음 일식·일본 식재의 보급·개발, 해외시장 정보 제공, 일본 식생활 문화 발신 등과 같이 보급·개발함으로써 수요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을 목표로 한 농림어업인·식품산업 사업자 대책을 추진하는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 지역 등에서의 상표권 침해 대책을 확충하고 식물 품종 보호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지적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⑤ 생산자재비 감축

생산자재의 비용 감축을 위해 단비(單肥)와 단비를 혼합한 배합 비료, 에코 피드 등의 저비용 사료, 대형포장 농약과 제네릭(Generic) 농약, 중고농업기계 등의 저비용 자재의 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토양과 퇴비 속에 포함된 비료 성분을 바탕으로 한 시비 등에 의한 비료 이용효율 향상, 종합적 병해충·잡초 관리(IPM)를 통한 농약 사용량의 억제 등에 의해 자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3) 영농인 육성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도입에 의해 겸업농가와 소규모 경영을 포함한 의욕 있는 모든 농업인이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취농자를 확보하여, 농업경영의 다각화·복합화 등 6차 산업화에 의한 부가가치 증가분을 경영에 도입하는 대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가 육성·확보되도록 한다.

한편 농업은 지역마다의 기상과 토양이라는 자연조건과 소비자와의 거리 등의 사회조건에 크게 좌우되므로 적지적작을 기본으로 지역의 실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체계 하에서 대규모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인도, 규모가 작아도 가공이나 판매에 몰두하여 특색있는 경영을 전개하는 농업인도, 각각의 창의 연구를 살리면서 영농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감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현장의 주체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다양한 노력·대책을 지원하는 시책을 전개해 가기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대책의 결과, 경영체가 지역농업의 후계자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관계기관이 하나가 되어 지원을 실시하는 체제에 의해, 기술이나 경영능력 향상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이농 농가나 부채를 안은 농가

의욕 있는 모든 농업인이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취농자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가 육성·확보되도록 한다.

의 경영자원을 원활히 계승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한다.

① 농업경영의 육성·확보: 가족·집락·법인경영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농업 후계자의 중심이 되는 가족농업 경영에 대해서, 경영규모의 확대와 농업경영의 다각화·복합화 등 6차산업화 대책에 의한 경영개선을 촉진한다. 이때 농업인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시정촌(市町村) 등 지역의 관계기관이 협력해 지역농업의 후계자를 육성·확보하는 구조로서 정착·보급되어 있는 인정농업인제도의 활용을 추진한다.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후계자가 부족한 지역에 있어서의 농업 생산 활동의 유지 등을 위해 소규모 농가나 겸업농가도 포함한 집락 영농의 육성·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지역의 실정을 감안해 집락 영농의 법인화와 6차산업화, 지역농업·농지 유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농업경영을 지속·발전시킬 의욕과 능력을 가진 법인경영은, 지역에서의 고용창출과 농업 생산 활동의 활성화, 농지 보전과 유효한 활용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그 육성·확보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시설·기계 정비,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화를 목표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 참여를 희망하는 회사, NPO(비영리 단체)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또, 경영의 다각화·복합화 등 6차산업화 대책을 촉진한다.

② 인재 육성·확보

다양한 농업경영이 전개되도록 폭넓은 인재의 육성·확보방안을 추진한다. 이때 농업인 자제의 후계자로서의 취농, 고용되는 형태로의 취농, 4년제 대학 등 다양한 학력을 가진 비농가출신자의 취농, 중노년층의 귀농 등 취농 형태와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따라 각각의 취농 형태·경로에 맞는 각종 정보제공, 농업고교나 농업대학교 등에서의 인재육성, 농업법인과 해외 등에서의 실천적 연수 등을 지원한다. 또한 최초 농지 확보와 기계·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인재를 육성·확보한다.

농업과 지역 활성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농촌여성의 농업경영으로의 참가나,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과 판매 등에 진출하는 여성 기업 활동을 촉진한다. 또한 여성이 지역사회에 한층 더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경영 협정 체결 촉진 등을 통하여 농촌에서의 일과 생활의 조화를 배려한 방식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의 남녀 공동 참가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여성임원과 여성농업위원 채용 증가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그 실현을 위한 보급·개발을 실시한다.

또한 농촌의 고령자가 농업 생산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내외에서 서로 돕는 활동을 촉진하고 노력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고령자가 지닌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새로운 농촌자원으로 파악해 고령자가 이를 활

용해 농업과 지역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교류와 지역문화 전승 활동을 촉진한다.

③ 수탁 조직의 육성·확보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에 의해 작업의 외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생산 현장의 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규모 확대와 주요 부문으로의 경영자원 집중 등을 통한 경영발전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지역의 실정을 근거로 하면서 생산수탁조직과 낙농 등 보조 조직의 육성·확보를 추진한다.

④ 농업경영 자금

농업인이 각각의 경영 발전 단계에 따라 스스로 창의 연구를 살린 농업경영 발전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농업인이 자금 차입시 부담을 경감하고 직접금융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경영 특성에 따른 자금 조달의 원활화와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4) 우량농지 확보

2009년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의 책무로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용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 제도를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의 기초가 되는 농지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용과 그 외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제도를 검토한다.

① 토지이용 및 전용 계획

농지 전용규제를 엄격하게 하고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확대하는 등 우량 농지의 확보가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② 농지 집적

지역의 실정에 따라 농지의 이용 집적을 진행함으로써 농지의 유효이용을 촉진한다. 이때 농지보유 합리화 사업, 농지이용개선 사업과 농업 생산기반 정비의 활용에 의한 농지 집적과 함께, 시정촌, 시정촌 공사,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위원회와 연계하여 농지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농지소유자를 대리하여 농지 대부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농업용지 이용 집적 원활화 사업 대책을 추진한다.

③ 경작방폐지 대책

경작방폐지의 해소를 위해 재생이용 대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 대책을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2009년에 개정된 농지제도에 있어서 새롭게 설치된 농업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의한 조사·지도와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유휴 농지에 대해서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 등을 적절히 운용하여 유휴 농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하여 농업용지 구역을 중심으로 경작방폐지를 재이용하는 한편, 발생을 억제한다.

식량자급률 향상의 기초가 되는 농지확보와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한다.

④ 농지정보

농지정보와 이용 상황 등에 관한 농지정보(지도정보)를 정비하고 향후 호별소득 보상제도를 비롯해 경작방폐지의 발생 억제·재생이용 대책, 농업 생산기반 보전 관리와 정비 등의 제반 시책에 있어서 이활용을 추진한다.

(5) 농업재해 보상

농업재해 발생 시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보험의 구조를 이용한 농업재해 보상 제도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한다.

(6) 작업 안전대책

농작업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많은 고령자가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작업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특히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의 관계자 협력 하에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농업기계의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7) 생산기반 정비

농업의 기반은 토지와 물로, 양호한 영농 조건을 갖춘 농지와 농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 생산기반 보전 관리·정비는 일본의 농업생산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식량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 생산기반의 보전관리와 정비를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시행체계나 사업구조 등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한다.

농업 생산기반의 보전관리 및 정비의 시행체계나 사업구조 등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국민의 이해를 얻는다.

① 기본 인프라 관리

수리시설은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이지만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관리자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공급될 지 여부는 불안정하다. 따라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시설의 감가상각 비용을 절감하여 시설 진단·보수·갱신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전략적인 보전관리를 추진한다.

② 지역 맞춤형 제도

종래의 시설마다 국가가 일부를 보조하는 체계를 개혁하여 지역의 창의 연구를 살린 새로운 교부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때 지역의 재량으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 지역의 요구에 맞추어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정비를 추진한다.

③ 생산기반 정비

농작물의 작부 면적 확대, 단수·경지 이용률 향상을 위해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논·밭의 유효활용을 가능케 하는 보리·대두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의 배수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지하수통제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미분용 쌀·사료용 쌀의 생산 확대 등에 따라, 지역에서 필요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대책을 강구한다.

(8) 관련 대책

화학비료·화학합성농약의 사용량 절감뿐만 아니라, 농지에서의 탄소 저장량 증가에 따른 토양관리, 논 생태계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겨울철 담수관리와 지역에 살고 있는 천적 곤충의 생물기능을 활용한 농법 등 환경보전 효과가 높은 영농 활동의 도입을 촉진한다. 또한 해당 영농활동에 대한 환경보전 효과와 농업경영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실시하는 농업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유기농업추진법에 근거하여 그 대책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유기농업기술의 확립·보급, 산지 규모의 확대와 산지 간 연계에 의한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이해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유기 JAS제도 활용을 추진하는 등을 통하여 유기농산물 생산·유통이 더욱 확대되도록 한다.

3. 농촌지역 개발

(1)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농업인에 의한 생산·가공·판매의 단일화와 농업과 제2차·제3차 산업의 융합 등에 의해 농산어촌에서 유래하는 농림수산물, 바이오매스와 농산어촌의 풍경,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험·지혜에 이르는 모든 「자원」과 식품산업, 관광산업, IT산업 등의 「산업」을 연결시켜 지역 비즈니스의 전개와 새로운 업태의 창출을 촉진하는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

①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창조

농림수산업·농산어촌에 유래하는 농림수산물, 부산물 등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술혁신과 농상공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자원 활용의 가능성을 추구한다. 이때 잠재적인 수요를 개척해 새로운 소재와 신상품을 개발하고 타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활용 방법 창출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조를 추진한다. 특히 「녹(綠)과 수(水)의 환경 기술 혁명」으로서 소재·에너지·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책정함과 동시에 이에 근거해 각종 정책을 전개한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창출에 중사할 인재를 육성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농림수산업·농산어촌에 관련된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함에 따라 6조 엔 규모의 신산업을 농산어촌 지역에 창출함을 목표로 한다.

② 바이오매스 산업

지역 비즈니스의 전개와 새로운 업태의 창출을 촉진하는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

농촌지역에 풍부한 볏짚, 잔가지 등의 미이용 자원, 음식물쓰레기 등의 폐기물로 만들어진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와 플라스틱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거점을 정비하여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을 실시하고 이러한 대책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생산된 바이오매스 제품을 지역에서 석유대체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③ 재생가능 에너지

농촌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태양광, 수력, 풍력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생산 확대와 지역에서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발전으로 이어지는 등 농촌지역에서의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공급시설의 정비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촉진하며,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일정 방법에 따른 전량 고정가격 매수제도 도입 등 농촌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2) 도농 교류 등

① 수요 창조

방일 외국인과 관광부문의 소비가 많은 고령자 등 농촌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교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방일 외국인 3,000만 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에 의한 도시와 농촌의 공생을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 콘텐츠 개발 등 관광 관계자와 농촌 지역이 연계하여 실시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② 인재 확보·육성

도시에서 농촌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 도시와 농촌 지역을 연결하여 도시지역의 인재를 활용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도시지역의 NPO,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농촌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③ 교육, 의료의 장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평안, 위안을 주는 기능과 농작업 등의 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 심신기능의 회복·향상과 건강의 유지·증진 등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주목해 도시와 농산어촌, 관계부처가 연계하여 농산어촌을 교육, 의료·간병의 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이때 이러한 기능의 효과를 조사·검증해 구체적인 시책의 실시로 연결한다.

미래 세대가 농산어촌에서의 체험을 통해 해당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 농산어촌에서의 경제효과 외에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을 유도한다.

미래 세대가 농산어촌에서의 체험을 통해 해당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도시 농업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도시 주민에게 공급, 가까이 위치한 농업체험 장소의 제공, 재해에 준비된 오픈 스페이스 확보, 열섬현상 완화, 녹지 공간 제공이라는 도시농업의 기능과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주민의 이해를 촉진하면서, 도시농업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도시 농지 보전이나 도시농업 진흥에 관련된 제도를 재검토하고, 시민농원과 농산물 직매소의 정비, 도시 주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한 시민농원·체험농원 등에서의 농업체험과 교류활동의 촉진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도시주민의 이해를 촉진하면서, 도시농업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4) 취약기능 유지와 지역자원·환경의 보전

농촌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인해 취약 기능이 저하되어 농촌 커뮤니티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과소화가 현저한 중산간지역 등에서는 지역자원의 보전관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면 공동작업 등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어 온 농업생산을 유지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을 지탱해 온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농지와 산림 황폐에 의한 국토 보전상의 문제도 심각해진다. 더 나아가 식료의 안정공급 기능이나 그 외 다원적 기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농촌 커뮤니티의 유지·재생

농촌 커뮤니티의 유지·재생을 위해 각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생활 지원, 지역자원의 활용이나 환경보전 대책 등도 볼 수 있으며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이들 지역민의 대책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이러한 대책을 정부와 지역이 하나가 되어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책을 검토한다.

②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

중산간지역은 유역의 상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원함양, 빗물의 일시적 저장, 토사 붕괴 방지 등 국토보전상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여 하류의 도시 주민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윤택한 생활이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중산간지역은 평지에 비해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조건이 불리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등 농업인이 감소하고 있고, 경작방폐지가 증가하면서 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다원적 기능이 저하되어 국민 전체에 있어서 경제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농업 생산 조건의 불리를 보정하기 위한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를 계속 실시함으로써 경작방폐지의 발생 방지와 해소를 도모해 다원적 기능을 보전해야 한다. 또한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자 지원 체제나 취약간의 연계 등 안정적인 환경을 만듦으로써 농업 생산 활동을 유지하도록 한다. 본 직접지불제도에 대해서는,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검토와 아울러 현행 예산 조치를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향후 대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의욕 있

는 다양한 농업인의 육성·확보와 생산성 향상 등을 추진함으로써, 중산간지역에서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촉진한다.

③ 농지·물·환경보전 향상 대책

농지·물·환경보전 향상 대책은 농지, 농업용수 등의 자원과 환경의 적절한 보전 관리 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 모두에게 효과가 높은 공동 활동」과 「농업인 모두로의 선진적인 영농 활동」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2010년도에는 본 대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공동 활동의 강화와 환경보전형 농업의 추진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실적과 현장의 의견도 감안하여 효과와 과제를 명확히 한다. 또한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와 환경보전 기능의 유지·향상에 관한 직접적인 조성 수법(예를 들면 「환경 지불」)의 바람직한 자세도 포함하여, 국토 보전, 수원함양, 자연환경 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향후 시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④ 조수(鳥獸) 피해 대책의 추진

조수 피해가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심각화·광역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이에 대응한 효과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종래의 시책에 대해서는 「조수에 의한 농림수산업에 관계된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정촌에 의하여 피해방지계획이 작성되어 지역이 직접 대응하는 체제 만들기와 계획에 따른 대책이 추진되어 왔다. 향후에는 피해의 심각화·광역화에 대응해, 지금까지의 대책에 더하여 광역적이고 횡단적인 연계 강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충실히 하여 조수 피해의 경감을 도모한다.

또한 포획한 조수에 대해서는 식육 이용 등 폭넓은 활용 방안을 검토해 유효 활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에서의 대책 지도자와 포획 담당지를 육성·확보한다.

⑤ 쾌적하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촌 생활의 실현

호우, 지진,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쾌적하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촌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창의 연구를 살리면서, 취약 기반의 계획적인 정비와 하드·소프트 대책이 조화되어 재해에 강한 농촌 만들기를 관계부처들이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논 생태계와 마을 주변의 땅과 산의 보전을 중시하는 농촌 환경 보전 대책을 추진한다.

(5) 농산어촌 활성화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를 비롯하여 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발적인 대책을 촉진하고, 그 효과적인 전개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연계 하에 「농산어촌 활성화 비전」을 새롭게 책정한다. 농산어촌 활성화 비전에서는 농산어촌의 장래상·목표를 명확히 하여 국가와 지방과의 역할 분담에 의한 활성화 시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관계부처의 연계 하에 「농산어촌 활성화 비전」을 새롭게 책정한다.

4. 워단적 정색

(1) 기술·환경정책 추진

농업 생산 비용 절감과 6차산업화의 기초가 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푸드체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바이오 테크놀로지 등 최첨단 기술의 산업화, 지구온난화 문제로의 공헌과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면에서의 국제 공헌,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 국제경쟁력 관점도 감안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농림수산 분야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술·환경 전략을 2010년 중에 책정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적재산의 보호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을 진행한다.

농림수산 분야의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술·환경 전략을 2010년 중에 책정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① 혁신적인 기술개발의 추진

다양한 농정 과제들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신제품과 혁신적인 생산기술의 개발, 신수요를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식품, 농림수산 생물의 기능을 이용한 신소재·의약품 등의 개발, 온실가스 발생 억제 기술 등의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급·실용화로 연계시킨다.

② 연구개발에서 보급·산업화까지의 일관 지원

연구 성과를 확실히 보급·실용화로 연결해 가기 위해 학자, 민간 등이 폭넓은 분야에서 인재와 정보를 결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매니지먼트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연구 단계에 따라 인재, 지적 재산·연구 성과, 연구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연구개발에서 산업화까지를 일관하여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시장 수요를 찾으면서 실용화·산업화를 진행시키는 흐름을 강화하고, 산학관 연계의 구조를 구축한다. 산지에서는 보급 지도 센터와 대학, 기업, 시험연구기관 등이 서로 연계하면서 기술 지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전개하는 등 연구 성과의 보급·실용화 체제를 강화한다.

③ 지구 환경 문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및 식품 산업에 있어 에너지 절약 시설·기계의 도입과 시비의 적정화, 농지의 탄소 저장량 증가로 이어지는 토양관리 등의 영농활동을 보급·추진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배출삭감 효과와 농지토양의 탄소 저장 효과의 시각화,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추진한다.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고온피해 등을 피하기 위한 재배법과 시설의 도입, 고온 내성 품종으로의 전환 등을 진행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하고 기후변동에 의한 영향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로 실시해, 국제사회의 환경 문제에 공헌한다.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위해 농촌이 가진 풍부한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용의 촉진, 효율적인 수집 시스템의 구축, 효율적으로 유용 물질로 변환하는 기술 개발·실증, 지역에서의 활용 추진 계획의 책정, 이용의 원활화를 위한 지역에서의 시설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형성되는 많은 생물에게 생식 환경을 제공하는 전 원지역·마을 주변의 땅과 산을 보전해 가기 위해, 지역에서 책정될 계획 하에 농업 생산을 유지하고 생산기반을 관리하는 생산 관련 활동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양립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겨울철 담수관리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효과가 높은 농업 생산 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 외, 농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평가하는 지표의 개발, 생태계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생태계를 고려한 논과 수로 등의 정비기술 개발·보급, 대책 사례의 정보 제공 등을 진행시키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이해의 증진을 도모한다.

④ 지적재산의 보호·활용

지적재산은 품질 향상과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적재산의 보호·활용을 위해 신 기술, 신품종의 지적재산으로서의 권리취득과 활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의 농림수산물 중심의 한 식생활 문화 대책과 지역 브랜드화를 목표로 한 대책을 지원함과 동시에, 식문화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식물 품종 보호제도의 고위 평준화를 위해 지원·협력하고, 해외의 상표출원 상황을 감시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또한 농가가 독자적으로 알고 있는 노하우를 농업인이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세계 최첨단 AI(Agri Informatics) 시스템을 개발해 제공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이때 지적재산으로서의 관리수단 등에 대해 검토한다. 결정된 산지에서 생산하고 지정된 품종, 생산 방법, 생산 기간 등이 적절하게 관리된 농림수산물에 대한 표시인 지리적 표시를 지원하는 구조에 대해 검토한다.

(2) 연계 축의 구축

농업이 가지는 식량의 공급 기능과 다원적 기능은 도시 주민을 포함한 많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풍부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풍부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도, 「숲의 영양분이 바다를 기른다」, 「숲은 바다의 연인」이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농산촌의 존재가 중요한 역할·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다양한 주체가 국산농산물에 담겨진 농업·농촌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농촌과 관련된 활동을 하여 농업·농촌을 지탱함으로써 발휘된다.

따라서 소비자, 생산자, 사업자가 함께 농업·농촌을 지탱하는 「굴레」의 형성과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일본의 농업·농촌의 가치와 의의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화를 위해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일본의 농업·농촌의 가치와 의의를 공유한 다음,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관계를 구축하여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판로 개척, 지역 활성화 실현에 이바지한다.

또한 도시주민에 대해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시책을 진행하여 국민 전체에 의한 식료·농업·농촌의 유지·재생을 위한 운동을 추진한다.

① 식(食)과 농(農)의 관계에 관한 정보 발신 강화와 기존 시책의 중점화

「농」을 지탱하는 연계 축의 기초가 되는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 소비자에게 선호되는 「맛내기」를 포함한 식재를 살리는 방법, 건전한 식생활과 같은 식과 농의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발신하는 대책을 강화한다. 또한 미분용 쌀·사료용 쌀 생산 확대에 대응한 이용 촉진, 국산농산물의 소비확대, 농상공 연계,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여러 사람의 연계에 주목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보 발신의 강화, 코디네이터에 의한 매칭의 충실, 관계자 사이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도모하여 연계 축으로서 발전시킨다.

② 인재 확보

연계 축을 구축하려고 하는 소비자, 생산자, 사업자, NPO, 대학, 연구기관간의 지식 및 기술 등에 관한 코디네이터와 교류회의 개최, IT의 활용 등을 통하여 관계자 사이의 매칭 기회를 확충한다. 또한 이와 같은 코디네이터와 중개기관의 육성을 추진한다. 이때 지방지분부국을 포함하여 공무원도 연계의 기반이 되는 인재 네트워크 형성과 각종 상담기회 확충을 통하여 연계 축을 구축·강화하는 데 노력한다.

③ 연계 축의 대책에 관한 국민이해의 촉진과 구체적 행동의 환기

소비자가 농업인과 농산물 거래의 사전 계약을 실시하는 농업인 「지역지원형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과 행정, 시민, 기업, NPO 등이 연계하여 지역의 과제를 사업에 의해 해결하는 대책인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포함해, 연계 축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대책에 대하여 선도적인 대책과 성공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넓게 발신해 국민 각층으로의 이해와 구체적인 행동을 환기한다.

5. 관련 기관장비

식료, 농업 및 농촌과 관련한 단체(농업협동조합, 농업위원회 계통 조직, 농업공제단체, 토지개량구 등)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공급과 국내 농업생산 증대 등 본 기본계획의 기본이념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달성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지역 일체가 된 대책을 추진하고 개개의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사업운영 문제가 지적되거나 지역 농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각 단체가 본 기본계획의 방향에 입각하여 각각의 본연

식료, 농업 및 농촌과 관련한 단체가 본 기본계획의 방향에 입각하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의 역할을 달성해 간다는 관점에서, 식량, 농업 및 농촌에 관한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효율적·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농업인의 신뢰를 얻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영의 건전화와 컴플라이언스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지도·감독을 적절히 실시하면서 효율적인 재편 준비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표 1 전체 작부면적, 농지면적, 경지이용률

단위: 만 ha, %

구분	2008년	2020년
전체 작부면적	426	495
농지면적	463 (2009년 461)	461
경지이용률	92	108

표 2 식료자급률 목표

단위: %

구분	2008년	2020년
공급열량 기준의 종합식료자급률	41	50
생산액 기준의 종합식료자급률	65	70
사료자급률	26	38

- 주 1: 생산액 기준의 종합식료자급률은 2020년도 각 품목의 단가가 현상(2008년도)과 동일 수준으로 계산됨.
 2: 사료자급률은 사료용 곡물, 목초 등을 가스화양분총량(TDN)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것임.

참고자료

일본 농무성,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 2010.